

당정청, 추경안 25일 전후 국회 제출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 추경 규모는 이달 중순경 확정 "필요시 재원 마련에 국제발행도 검토"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달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의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온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이라고 홍대변인은 전했다.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경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축적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X에 대한 안전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가 예산과 3월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 이혜찬(가운데) 대표와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오른쪽 세번째)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 등을 추경 편성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잉여세계금, 할인잉여금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제 발행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위기지역 연장 요청 등이 4·3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경 편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오는 4일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종결 시점이니 선거와 관계 없이 요구 목소리가 높다"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경남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지

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4월 중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해 협조키로 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장

화를 위한 법안, 규제역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도 공유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회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정읍·고창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평화당 유성엽 의원



지역 등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에 자동안전보상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내 필요 예산을 잇따라 확보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정읍·고창지역에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읍시 영화교 가설공사 8억원 △고창군 마을 자동안전보상시스템 설치사업 4.2억원 △고창군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3억원 △고창군 염수분사 장치 설치사업 0.8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정읍시는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영화교 가설로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 및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고창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지정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은 물론 산사태, 급경사지, 침수우려

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창군은 재난대비 예·경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1년 무이자, 2012년 태풍 불리펀 및 덴민 등 최근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돌발성 홍수 및 범람으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사전 예방 및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

고창군 무장면 승계리에 위치한 방고개는 최고높이 127m로 경사도가 30도 이상이어서 강설시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여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염수분사 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진성 기자

군산 특별교부세 15억2100만원 확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특교 확보로 지난 해부터 3년간 진행 중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보여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일 특별교부금 15억 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공개한 교육부 특교를 포함하면 이번달만 해도 36억 8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특교 확보 사업들은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다는데 의미가 더 크다. 상세 사업 내역으로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5억,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5억원, 범취취약지역 범범용 CCTV 설치 5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100만원이 포함됐다.

해방동에 위치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노후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로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민원이 지속적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고군산 연결도로 완전개통에 따라 늘어난 도로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익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정책토론회, 4일 국회 개최 | 특별법 정당성 확보 공론의 장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4일 오후 2시와 3시, 국회에서 연속 개최된다.

조배숙·이춘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전라북도·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다양한 지원 기관들의

홍보 활동을 통해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4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조배숙 의원·사진)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회로, 최지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좌장으로, 김기표 교수(전 법제처장)와 권대영 박사(한국식품연구원)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손정민 교수(원광대), 문경민 전무(주)하림(지주), 안진영 대표(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등이 참석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과 정책토론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이번 상품전 및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및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오늘부터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 작업을 3일부터 시작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관련해 "13개 국내 화상상봉장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상봉장에 따라 사정이 있겠지만 4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급적이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보수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다 같이 (시작)하고, 완료는 사정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4월 말에 완료 목표"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북측의 화상상봉장 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처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되면 북측과 협의해서 북측의 화상상봉장 개·보수, 물자 전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